

23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2023. 8.

제 출 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회장 귀하

이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 「23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 8.

한국법령정보원

원 장 정 만 석

< 참여연구진 >

연구책임자 : 정주영 (한국법령정보원 부장)

공동연구자 : 권철호 (한국법령정보원 부장)

김효진 (한국법령정보원 연구원)

이세영 (한국법령정보원 실장)

이현아 (한국법령정보원 부장)

이호영 (한국법령정보원 연구원)

목 차

제1장 서 론	1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II. 연구내용	2
III.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0
제2장 입법평가 결과	11
I. 정비항목별 현황	11
II. 정비항목별 정비 사례	12
III. 소결	24
제3장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25
I.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운영 현황	25
II.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52
제4장 입법평가 제도 개선방안	55
I. 타지방자치단체 입법평가 규정 및 세부 심사기준	55
II. (일본) 이타미시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	79
III. 입법평가 규정 및 운영방식 개선방안	80
【별책 1】 23년 세종특별자치시 입법평가 연구용역 - 위원회별 소관 조례 입법평가 -	

제 1 장 서론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분권의 발전에 따라 조례 제·개정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세종시도 2023. 8. 30. 현재 808건(교육청 포함)의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나,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조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특히, 조례 중 행정환경과 부합하지 않거나 유명무실한 조례 및 시민권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례 중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조례(134건)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개정안 등 정비방안을 도출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3조(입법평가 실시 및 대상) 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행 중인 조례에 관하여 입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입법평가의 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 또는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2. 기관설치·인사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에 적합한 입법평가 규정 및 운영방식 개선안을 마련하여 자체 평가 제도 안착을 도모하고자 함

II. 연구내용

1.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현황 분석 및 문제점 진단

○ 입법평가 대상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현행 조례(교육청 조례 포함) 중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 이상 경과('19~'20년)한 조례 134건에 대하여 입법평가를 실시

계	행복위	산건위	교안위
134건*	41건	48건	45건

* 시청 105건, 교육청 29건

[표]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입법평가 대상 조례 목록

연번	조례명	상임위
1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행정복지
2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행정복지
3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행정복지
4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행정복지
5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행정복지
6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행정복지
7	세종특별자치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행정복지
8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	행정복지
9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행정복지
10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행정복지
11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행정복지
12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행정복지
13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행정복지
14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행정복지
15	세종특별자치시 수입증지 조례	행정복지
16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행정복지
17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행정복지

18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행정복지
19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행정복지
20	세종특별자치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	행정복지
21	세종특별자치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행정복지
22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행정복지
23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행정복지
24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행정복지
25	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행정복지
26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행정복지
27	세종특별자치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행정복지
28	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행정복지
29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행정복지
30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행정복지
31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행정복지
32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행정복지
33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행정복지
34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행정복지
35	세종특별자치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행정복지
36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행정복지
37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행정복지
38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행정복지
39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행정복지
40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행정복지
41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양치교실 지원에 관한 조례	행정복지
42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인수 조례	산업건설
43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	산업건설
44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산업건설
4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 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산업건설
46	세종특별자치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산업건설
47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산업건설

48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산업건설
49	세종특별자치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산업건설
50	세종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산업건설
51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산업건설
52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산업건설
53	세종특별자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산업건설
54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산업건설
55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산업건설
56	세종특별자치시 공영개발사업 운영 조례	산업건설
57	세종 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산업건설
58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	산업건설
59	세종특별자치시 부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산업건설
60	세종 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산업건설
61	세종특별자치시 마을농업행정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산업건설
62	세종특별자치시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산업건설
63	세종특별자치시 명예농업부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산업건설
64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 조례	산업건설
65	세종특별자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산업건설
66	세종특별자치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	산업건설
67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	산업건설
68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산업건설
69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	산업건설
70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산업건설
71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산업건설
72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산업건설
73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산업건설
74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산업건설

75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산업건설
76	세종특별자치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산업건설
77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산업건설
78	세종특별자치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산업건설
79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산업건설
80	세종특별자치시 임업관계자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산업건설
81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산업건설
82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산업건설
83	세종특별자치시 소형특수농기계면허취득교육비지원에 관한 조례	산업건설
84	세종특별자치시 수도사업 운영 조례	산업건설
85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산업건설
86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	산업건설
87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산업건설
88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산업건설
89	세종특별자치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산업건설
90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 운영 조례	교육안전
91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교육안전
92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안전
93	세종특별자치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안전
94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안전
95	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교육안전
96	세종특별자치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교육안전
97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교육안전
98	세종특별자치시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교육안전
99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교육안전
100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교육안전
101	세종특별자치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 조례	교육안전
102	세종특별자치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교육안전
103	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 조례	교육안전
104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교육안전
105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지급 조례	교육안전
106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교육안전

10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교육안전
10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부모교육에 관한 조례	교육안전
10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교육안전
11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양치교실 설치 등에 관한 조례	교육안전
11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교육안전
11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교육안전
113	세종특별자치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교육안전
11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	교육안전
11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도서관 및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조례	교육안전
11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안전
11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	교육안전
11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교육안전
11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안전
12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	교육안전
1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교육안전
12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교육안전
12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가정 내학생 학대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안전
12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교육안전
12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	교육안전
12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교육안전
12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	교육안전
12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억제에 관한 조례	교육안전
12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학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안전
130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	교육안전
13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안전
13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안전
13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교육안전
13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교육안전

○ 상임위별·분야별 위임조례와 자치조례 분류 및 분석

- 위임조례로 분류할 경우, 위임한 상위법령 조문(내용)과 위임사항을 반영한 조례

조문(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현행 세종시 조례의 문제점 진단

- 「자치법규 입안기준」(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법제처), 「알기 쉬운 조례만들기 지원 사례집」,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4조에 따른 평가기준 등과 연계하여 시 조례의 전반적인 문제점 진단

<자치법규 입안기준>

입안기준	주요 내용
입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의 요구,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주요 업무계획 추진 등에 따른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가 필요한지 여부 * 입법 배경·취지 및 운영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것, 문제 제기된 구체적 배경과 이유를 조사·확인할 것
입법형식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에서 위임 또는 법령에 따라 반드시 정하여야 하거나 직권에 의한 입법의 경우에 조례의 형식이 적절한지 여부 * 조례규율 내용이 상위법령에 없는지, 있는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법령 없는 경우 : 사무성질, 법령위반 등 확인 - 상위법령 있는 경우 : 양자 사이 모순, 저촉이 없는지 검토 *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단순히 확인, 재 기재하는 것은 입법 체계적, 입법 경제상 바람직하지 않음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의 기본정신인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 * 포괄위임 금지(규칙으로 포괄위임은 금지) ▪ 집행기관의결기관 간 권한분리 및 배분원칙 등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 상위 법령 및 자치법규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 및 균형, 자치법규 상호간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은 없는지 여부

입안기준	주요 내용
<p>표현의 명료성 및 평의성</p> <p>* 실제 수요자의 관점에서 판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오해되지 않도록 간결하고 정확하게 표현되는지 여부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로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을 준수하고 전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배열하는지 여부 <p>* 명확성 :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지킬 수 있도록 명확하고 쉽게 써야 함</p>

2. 입법평가 기준 및 심사기준표에 따라 입법평가 실시

- 행정복지, 산업건설, 교육안전 등 3개 위원회 소관 과업대상 조례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4조의 평가기준에 따른 입법평가 실시

<p>「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p> <p>제4조(평가시기 및 기준) ① 입법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4.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5.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p>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의 입법평가 심사 기준에 따른다.</p>
--

※ 입법평가 심사기준표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 별표 참조

- 조례 소관부서가 제출한 조례 기본현황, 사업추진 내역, 위원회 운영현황, 부서의 견 등 참고하여 평가

3. 입법평가 문제점 진단에 따른 조례 개선안 및 정비방안 도출

- 입법평가 결과 시 조례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개정안 등 개선안 마련
- 입법평가 결과와 개선안을 종합하여 관련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입법평가 위원회」에 상정, 타당성 검토 및 최종 개선안 도출

4.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운영개선방안 도출

- 현행 구성 및 운영 중인 위원회의 운영실태 조사 및 분석
 - 법정위원회 및 조례상 설치 위원회의 설치근거 확인
 - 위원회 구성의 성별 및 자격여부의 적정성 확인
 - 운영실적 부진 또는 미흡한 위원회 파악하여 유지 필요성 확인
 -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통합여부 검토
- 조사·분석 결과, 위원회 운영개선 방안 도출

5. 입법평가 제도 운영 개선방안 마련

- 타 시도 운영사례 비교·분석을 통해 세종시에 적합한 입법평가 규정 및 운영방식 개선안 마련
- 자체 입법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 제언

Ⅲ.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조례의 어려운 용어 및 문장을 일반인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용어 및 문장으로 정비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조례 입법평가를 통하여 세종시 현실에 부합하는 조례로의 제·개정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책실현 도구로써 조례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제고하여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연구용역 수행을 통하여 제시된 결과물을 개별 조례 정비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조례의 질적 향상 도모

제 2 장 입법평가 결과

I. 정비항목별 현황

○ 평가대상 조례 134건에 대한 입법평가 결과 다음 표와 같이 정비의견을 제시함

위원회명	평가대상 조례	현행 유지	정비필요						
			소계	일반 정비	개정 권고	필수 개정	통합 권고	폐지 권고	기타
계	134	6	134	78	36	7	0	3	4
행정복지	41	2	39	28	6	3	0	2	0
산업건설	48	3	45	30	11	3	0	1	0
교육안전	45	1	44	20	19	1	0	0	4

○ 정비항목별 정비사유

- 정비항목별 정비사유는 다음 표와 같음

정비항목	정 비 사 유	건 수
일반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른 정비 (맞춤법, 오타, 띄어쓰기, 용어 등) 목적조항 약칭사용, 법령 제명 및 조례 제명 오기, 인용 법령 조항 오기 상위법령 개정 시 인용조항의 위치이동으로 조항 변경된 사항 미반영등 	78
개정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타 지자체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이 있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안을 제시한 경우 	36
필수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상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 상위법령의 내용상 개정사항을 미반영하고 있는 경우 	7
통합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유사 조례와 통합 운영이 필요한 경우 	0
폐지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례를 폐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3

기타	○ 계획수립 필요 ○ 예산 확보 및 집행 필요	4
현행유지	○ 개정이 불필요한 경우	6

II. 정비항목별 정비 사례

1. 일반정비(78건)

○ 일반정비 목록

- 평가대상 134건 조례 중 78건의 조례에 대하여 일반정비 사항을 제시함

연번	조례명	소관 위원회
1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행정복지
2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행정복지
3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행정복지
4	세종특별자치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행정복지
5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	행정복지
6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행정복지
7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행정복지
8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행정복지
9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행정복지
10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행정복지
11	세종특별자치시 수입증지 조례	행정복지
12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행정복지
13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행정복지
14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행정복지
15	세종특별자치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행정복지
16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행정복지
17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행정복지
18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행정복지
19	세종특별자치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행정복지
20	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행정복지

21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행정복지
22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행정복지
23	세종특별자치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행정복지
24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행정복지
25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행정복지
26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행정복지
27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행정복지
28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양치교실 지원에 관한 조례	행정복지
29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인수 조례	산업건설
30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산업건설
31	세종특별자치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산업건설
32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산업건설
33	세종특별자치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산업건설
34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산업건설
35	세종특별자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산업건설
36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산업건설
37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산업건설
38	세종특별자치시 공영개발사업 운영 조례	산업건설
39	세종 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산업건설
40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	산업건설
41	세종 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산업건설
42	세종특별자치시 마을농업행정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산업건설
43	세종특별자치시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산업건설
44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 조례	산업건설
45	세종특별자치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	산업건설
46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	산업건설
47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	산업건설
48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산업건설
49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산업건설
50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산업건설
51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산업건설
52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산업건설
53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산업건설
54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산업건설
55	세종특별자치시 소형특수농기계면허취득교육비지원에 관한 조례	산업건설
56	세종특별자치시 수도사업 운영 조례	산업건설
57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산업건설

58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	산업건설
59	세종특별자치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안전
60	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교육안전
61	세종특별자치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교육안전
62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교육안전
63	세종특별자치시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교육안전
64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교육안전
65	세종특별자치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교육안전
66	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 조례	교육안전
67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교육안전
6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교육안전
6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교육안전
7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부모교육에 관한 조례	교육안전
7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교육안전
72	세종특별자치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교육안전
7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안전
7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	교육안전
7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교육안전
7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안전
7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안전
7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교육안전

○ 일반정비 사례

(예시 1)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제9조(대장관리 등) 시장은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목욕권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배부대장과 목욕권 <u>수불대장</u> 을 작성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관리 등) 시장은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목욕권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배부대장과 목욕권 <u>출납대장</u> 을 작성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예시 2)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u>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u> 」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현

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 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시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시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목적 조항에서 약칭을 하지 않음

(예시 3)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현행	개정안
제7조(부담금의 부과·징수) 중략 ⑦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부담금의 부과·징수) 중략 ⑦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인용 법령 제명 변경 사항 반영

2. 개정 권고(36건)

○ 개정 권고 사례

- 평가대상 134건의 조례 중 36건 조례에 대하여 개정 권고 의견을 제시함

연번	조례명	소관 위원회	평가의견
1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행정복지	조례에서 적용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은 국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해당 규정으로 지방공무원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적용’이 아닌 ‘준용’의 방법에 따라야 하므로 정비가 필요함
2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행정복지	고문변호사의 해촉사유 중 ‘실적저조’ 또는 ‘불성실’한 경우는 의미가 다소 포괄적이어서 수시로 해촉하는 등 재량남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좀 더 객관적인 사유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3	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행정복지	「지방재정법」의 개정(2014.5.28.)으로 조례에서 사용하는 ‘경리관’은 ‘재무관’으로 변경되었으

			<p>며, 상위법령의 내용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므로 준용규정은 삭제하거나 해당 법에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음</p> <p>결손처분 사유는 「의료급여법」 제24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5조의 결손처분 사유에 따라야 하므로 이 사유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p>
4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행정복지	<p>보육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정하는 입법례가 있으나, 모든 위원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육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정을 권고함</p>
5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행정복지	<p>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운영하는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상위법령 및 조례가 적용되므로 삭제를 권고함</p>
6	세종특별자치시 성장장애인 출산양육 지원 조례	행정복지	<p>70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을 ‘여성장애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범위를 ‘장애인가정’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어 세종시도 예산 등의 여건이 된다면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권고함</p>
7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산업건설	<p>「지방세법」 제11장은 지역자원시설세를 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 소방분으로 구분하고 있음. 이 조례 제명과 목적은 특정자원분에 한정하고 있는데 조례 세입 조문은 특정시설분도 포함하는 모순이 있어 제명과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p>
8	세종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산업건설	<p>「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2 제4항은 같은 조 제2항 조사 및 결과 제공을 위한 필요한 자금 지원에 한정하고 있지만 조례는 자금 지원 범위를 이보다 넓게 정하고 있음. 인용조문의 지원 범위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거나 인용조문을 같은 법 제19조로 수정을 권고함</p>
9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산업건설	<p>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에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를 인용하면서 개정(2020.3.31.)되어 도입된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사회적경제기업에 포함시킬 것인지 검토가 필요함</p>

10	세종특별자치시 명예농업부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산업건설	조례는 명예농업부시장의 자격요건이 ‘세종시민,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추상적이며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알 수 없으므로 세종시의 실정에 맞게 세부적인 명예농업부시장의 자격요건을 정할 것을 제안함
11	세종특별자치시 주선택사업특별회계치 및 운용 조례	산업건설	조례 제7조에 용자·보조의 신청과 용자의 조건·상환 등에 대한 사항이 모두 규정되어 있어 조항이 길어지고, 가독성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짐. 관련 사항을 구분하고 조문을 신설하여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12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산업건설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실태조사 사항을 추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3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산업건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산금에 대한 사항을 현행 위임 법령에 따라 개정할 필요가 있음
14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진동 및 산면지 저감 실행에 관한 조례	산업건설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의3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조례에 “시행계획 수립·시행”과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15	세종특별자치시 임업관계자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산업건설	임업인 등에 대한 지원내용이 명확하지 않음. 지원내용을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과 같이 하여, 지원을 받는 대상이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정필요
16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산업건설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1조의 인용조문이 변경되었으나 반영되지 않음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에서 수질검사기록부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조례 제6조의 수질검사에 대한 검사결과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17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산업건설	조례 제3조제3항에서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함에도 예방조치 지시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제3조는 의무를 부여한 규정이

			므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조문 제정 취지에 부합해 보임
18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 운영 조례	교육안전	조례 제4조는 시민안심보험의 보상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 시 대상자의 전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는 경우 등 보험금 지급 제외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19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교육안전	조례 제5조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의무 이행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어린이놀이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점검 등 관리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와 같이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0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안전	조례 제8조제6항에서 생활안정지원 신고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직접 조사한 경우에도 피해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조례 제11조제1항에서 지원금을 중복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품을 반환하여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21	세종특별자치시 적재조사위원회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교육안전	조례 제10조에서 위원의 제척·기피 외에 회피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22	세종특별자치시 직·공무원 등 지원 조례	교육안전	조례 제5조제2항에서 공·사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 위원회의 구성원이 전원 당연직으로 구성된 것은 법 위반 또는 타 조례와의 충돌에 해당하지는 않음. 다만, 위원회 운영상 객관성 및 공정성 유지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따라서 위원회의 구성원에 당연직 위원 외에 위촉직 외부위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이 조례에서 장례비용의 중복지급은 금지하고 있으나, 장학금의 중복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외부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은 운영현실을 고려하여 제9조에 장학금 중복지급을 금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별표의 자녀장학금 및 장례비용의 지원기준과 금액은 중요도 및 물가변동 시 개정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조례 시행규칙으로 위임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23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조례	교육안전	조례 제4조의 장학생 선발시 성별, 소속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고, 특정 소수에게 장학금이 집중되지 않도록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24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교육안전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를 구축을 위한 근거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기여자에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5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교육안전	이 조례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사립유치원 및 사립학교 화장실(조례 제3조제2호 단서)의 기준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를 참조하여 수정하고, 위생용품수거함 설치 대상에 “여자 화장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정비 권고함
26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	교육안전	타 지자체 조례 참조하여, 국어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신설 권고함
27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학교 도서관 및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조례	교육안전	타 지자체 조례 참조하여 학교도서관 뿐만 아니라 독서교육의 활성화와 진흥을 위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 설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도서관 이용 및 독서교육의 공공성과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를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신설 권고함
28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	교육안전	타 지자체 조례 참조하여 학습부진 학생 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신설 권고함
29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교육안전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심의기관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위원회” 운영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존치 필요성의 감소, 상설 자문기관의 비효율성 등 현실을 반영하여 해당 위원회 규정 정비 권고하며, 정비방법으로 ① 위원회 규정(조례 제6조~제9조) 삭제, 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3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안전	이 조례 제7조제2항과 같이 당연직 위원을 특정 부서의 직책에 따르도록 함에 따라 조직 개편시 매번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면이 발생한다는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되, 당연직 위원을 특정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제한하여 개정 권고함
3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교육안전	타 지자체 조례 참조하여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신설 권고함
3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교육안전	이 조례 제5조에 따른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을 전제로 하는 개념인데, 이 조례나 다른 법령에서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조례 제5조의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3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학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안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학교, 학생, 통학차량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정비하고, 추후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을 근거로 통학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확대하여 타 지자체 교육청의 사례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 (안)를 제정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함
34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	교육안전	2019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무상교육 대상으로 확대하는 대신 “조례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를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이 조례에 따라 수업료 등의 면제를 적용받는 대상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무상교육 제외 학교로 재설정하여 전체적인 조문 정비가 필요함
3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안전	이 조례에서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교복, 생활복 및 체육복”에 대해 “교복등”의 약칭을 사용하여 지원대상에 대한 입법상 미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하고, 학생 임시배치 등 예외적인 경우 지원횟수를 초과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권고함
3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교육안전	교육청 및 직속기관 뿐 아니라, 세종시 공교육 현장에서의 건설공사를 이 조례의 적용범위로 포함시켜 보완 정비하고, 타 지자체 조례 참조하여 부

			실공사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 규정 신설 권고함
--	--	--	-----------------------------------

3. 필수 개정(7건)

○ 필수 개정 사례

- 평가대상 134건 조례 중 7건에 대하여 필수 개정 의견을 제시함

연번	조례명	소관 위원회	평가의견
1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행정복지	조례에서는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때는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무조건 변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변상할 책임이 있으나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는 구상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 개정이 필요함
2	세종특별자치시 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행정복지	생활체육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고 구체적인 법령의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법」을 제정(시행 2022. 6. 16.)하였으므로, 스포츠클럽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요지 등 운영 조례	행정복지	이 조례 일부 조문은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규칙이 제정되지 않았으며,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들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되므로 별도의 규칙을 제정할 필요성이 없어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내용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4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무료개방원에 관한 조례	산업건설	조례 제정 후 2020. 2. 4.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제19조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고 해당 규정에서 일정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이에 맞춰 조례 개정이 필요함

5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산업건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원의 임기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취지에 따라 위원의 임기를 정하고, 시행령에서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조례에서 중복하여 규정한 부분 삭제
6	세종특별자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산업건설	“기반시설특별회계” 및 “기반시설부담금”은 폐지(법률 제9051호, 2008. 3. 28., 폐지)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된 용어이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따라서, 위임하고 있는 법령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기반시설설치비용”으로 용어를 정비하여 개정할 필요 있음
7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안전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기반으로 한 자율적 조직이었으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됨. 따라서 조례 제2조의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개정하여야 함

4. 폐지 권고(3)

○ 폐지 권고 사례

- 평가대상 134건의 조례 중 3건의 조례에 대하여 폐지 권고 의견을 제시함

연번	조례명	소관 위원회	평가의견
1	세종특별자치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	행정복지	조례에서 부모학습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모학습 관련 단체(법인)가 지정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지원 실적이 전무하여 이 조례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처별·기관별(교육부, 교육청, 여성가족부, 세종시 등) 지원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찾기 힘들어 폐지를 권고함

2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행정복지	세종시는 이 조례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노인 목욕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는 마련하였으나 실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지원 계획이 없다면 폐지할 것을 권고함
3	세종특별자치시 부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산업건설	이 조례가 인용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2017. 1. 17.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 2023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조례 폐지를 의결했고 집행부가 이를 반영하여 2023년 하반기에 조례 폐지를 추진할 예정인 사정을 고려하여 조례 폐지 권고

5. 기타(3건)

○ 기타 사례

- 평가대상 134건의 조례 중 3건 조례에 대하여 기타(계획수립, 예산확보 및 집행) 의견을 제시함

연번	조례명	소관 위원회	평가의견
1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	교육안전	이 조례 제4조에서 언어순화운동 권장계획 수립·시행, 조례 제8조에서 언어순화운동 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계획수립 및 예산 지원이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언어순화운동 권장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할 것을 권고함
2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평화·통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교육안전	이 조례 제6조에서 평화·통일교육 진흥계획 수립·시행, 조례 제8조에서 평화·통일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계획수립 및 예산 지원이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평화·통일교육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할 것을 권고함

3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	교육안전	이 조례 제4조에서 준법교육 시행계획 수립·시행, 조례 제8조에서 준법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계획수립 및 예산 지원이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준법교육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할 것을 권고함
4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억제에 관한 조례	교육안전	이 조례 제4조에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억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계획수립이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억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필요함

6. 현행 유지(6건)

○ 현행 유지 목록

- 정비대상 134개의 조례 중 6건 조례에 대하여 현행 유지 의견을 제시함

연번	조례명	소관 위원회	평가의견
1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행정복지	현행 유지
2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행정복지	현행 유지
3	세종특별자치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산업건설	현행 유지
4	세종특별자치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산업건설	현행 유지
5	세종특별자치시 분노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산업건설	현행 유지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양치교실 설치 등에 관한 조례	교육안전	현행 유지

Ⅲ. 소결

- 과업대상 134건의 조례에 대하여 입법평가기준에 따른 입법평가 결과 비교적 최근에 제·개정이 이루어진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필요한 조례가 90% 이상에 해당하여 주기적인 입법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제 3 장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I.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운영 현황

- 입법평가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조례에 대하여 위원회의 구성 여부, 성별 구성의 적정성, 회의개최 운영 실적, 회의록 보존 여부, 위원회의 계속 설치·운영의 필요성 및 유사 위원회의 기능적 통합 필요성 등을 검토함

1.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1) 위원회 설치 근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4.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5.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후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기준 및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4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정책실명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4조는 세종특별자치시 주요정책의 결정·집행 과정에 참여한 사람의 실명과 그 의견, 추진과정 등을 기록·관리하고 주민에게 공표하는 ‘정책실명제’의 계획수립이나 대상사업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둠

(2) 위원회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민간위원을 포함하고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심의위원회의 회의, 간사, 수당,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기준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공개된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9명 위원 중 당연직 3명, 위촉직 남성3명, 여성3명으로 구성하여 성별균형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됨

- 사전검토 내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위원회는 매년 1회 개최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현행 유지 필요

※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 현황

연도별	2020	2021	2022
개최건수	1	1	1

2. 통일교육 활성화위원회

(1) 위원회 설치 근거

○ 「세종특별자치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제5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통일교육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일교육계획 수립
2.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3.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대행한다.

- 「세종특별자치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제5조에 따라 통일교육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나 따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함

(2) 위원회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시 관련업무·분야를 고려하여 위촉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규정하여 이해관계자가 심의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공개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15명 위원 중 당연직 2명, 위촉직 남성7명, 여성6명으로 구성하여 성별균형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됨

- 사전검토 내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매년 1회 개최되었고, 남북교류협력사업, 기금, 통일교육사업 등을 포함하여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음. 통일교육계획 수립,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므로 해당 위원회를 계속 설치·유지할 필요가 있음

※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 현황(만약 다른 위원회가 대행하고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 운영실적)

연도별	2020	2021	2022
개최건수	1	1	1

3. 지방세심의위원회

(1) 위원회 설치 근거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3.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른 감치에 관한 사항
6. 「지방세법」 제10조의2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
7.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따라 예산안에 첨부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관한 사항
8.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함

○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2) 위원회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 공개된 지방세심의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25명 위원 중 당연직 1명, 위촉직 남성15명, 여성9명으로 구성하여 성별균형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됨
- 사전검토 내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위원회가 활발히 개최되어 현행 유지
- ※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 현황

연도별	2020	2021	2022
개최건수	10	9	11

4. 사회보장위원회

(1) 위원회 설치 근거

- 「세종특별자치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위원회 심의) 의로운 시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의로운 시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선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의로운 시민의 인정 및 예우 등에 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보장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함

(2) 위원회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민간위원을 포함하고 성별을 고려하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규정하여 이해관계자가 심의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공개된 사회보장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19명 위원 중 당연직 2명, 위촉직 남성7명, 여성10명으로 구성되어 성별균형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됨

- 사전검토 내용에 따르면 해당 위원회에서 의로운 시민 인정 및 예우를 위한 사항을 심의한 사례는 없음

※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 현황(만약 다른 위원회가 대행하고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 운영실적)

연도별	2020	2021	2022
개최건수	미확인	미확인	8

5.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1) 위원회 설치 근거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의 설치·이설 및 철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설치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두는 세종특별자치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2) 위원회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 조례 제6조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조형물 관련 위원회

가 따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본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조형물 설치 사전 적정성 심의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구성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고 있으며, 관련 전문가를 3분의 2 이상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원회 제척·기피·회피를 규정하여 심의위원회를 공무원 위주로 구성하거나 이해관계자가 심의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전검토 내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위원회는 2022년 1회 개최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별도의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를 두지 않고 현행과 같이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해도 문제없다고 판단됨

※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 현황(만약 다른 위원회가 대행하고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 운영실적)

연도별	2020	2021	2022
개최건수	-	-	1

6. 부모학습협의회

(1) 위원회 설치 근거

○ 「세종특별자치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제8조(부모학습협의회) ①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과 그 밖에 부모학습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 및 자문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부모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2) 위원회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 부모학습 종합계획의 수립·시행과 부모학습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부모학습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부모학습에 관한 정책 책임자와 전문가, 이해 관계자들이 협의회에 참여해 전문적인 지식과 의견, 경험을 제시함으로써 세종시가 추진하는 부모학습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 다만, 조례 제8조제2항에서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평생교육협의회와 부모학습협의회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여 평생교육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규정한 것은 특별히 문제 없다고 판단되나, 실제로 부모학습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 및 자문을 위하여 회의가 개최된 실적은 확인하기 어려움

7. 운영위원회

(1) 위원회 설치 근거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시간
2.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수칙

3. 공동육아나눔터 보조인력 활용
 4.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
 5.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자부담금
 6.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가족품앗이 참여 부모,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부모 또는 조부모, 관계 공무원, 수탁기관 담당자 및 보육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육아나눔터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 ⑧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2) 위원회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시간, 이용수칙, 보조인력 활용, 프로그램 선정·운영 및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공동육아나눔터별 특성에 맞는 사항을 처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별 또는 생활권역별로 실무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위원회는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어 관련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8. 도시재생위원회

(1) 위원회 설치 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25명 이상 30명 이내
2.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20명 이상 25명 이내
3. 제2호에 따른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 또는 구: 15명 이상 25명 이내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원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 ⑤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지방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⑦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⑧ 지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⑨ 지방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⑩ 지방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의2(지방도시재생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지방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는 “지방위원회”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위원회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법 제7조제3항제2호”는 “제10조제3항제3호”로 본다.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의 규정을 따르며, 영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③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의2에서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데 위원회 위원의 수는 25명 이상 30명 이내여야 함. 세종시는 위원의 수가 26명이며 남성 14명 여성 12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있고 위촉직 위원은 4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사전검토 내용에 따르면 2020년 1회, 2021년 2회, 2022년 1회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으며 해당 위원회는 법정위원회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변경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존치의 필요성이 있음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은 위원의 임기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임기를 정할 것을 권고

※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 현황(만약 다른 위원회가 대행하고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 운영실적)

연도별	2020	2021	2022
개최건수	1	2	1

9. 지식재산위원회

(1) 위원회 설치 근거

○ 「세종특별자치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제13조(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① 진흥계획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
2.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3.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신설, 2019. 9. 30.>

(2) 위원회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 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과학기술진흥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2명 이외에는 모두 외부 전문가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있으며 (남성7명, 여성6명)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규정하여 심의위원회를 공무원 위주로 구성하거나 이해관계자가 심의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전검토 내용에 따르면 2020년 1회, 2021년 2회, 2022년 2회 위원회가 개최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별도의 지식재산위원회를 두지 않고 현행과 같이 ‘과학기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해도 문제없다고 판단됨

※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 현황(만약 다른 위원회가 대행하고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 운영실적)

연도별	2020	2021	2022
개최건수	1	2	2

10. 산지관리위원회

(1) 위원회 설치 근거

○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3조(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자문)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산지관리위원회(이하 “산지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장은 산지전용허가 시 목적사업의 성격, 주변의 경관 또는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배치 등을 고려할 때 전용하려는 면적의 적정성 등에 대해 산지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세종특별자치시는 「산지관리법」 제22조제2항을 설치근거로 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산지관리위원회를 두고, 산지전용허가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있음

(2) 위원회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 산지관리위원회는 위원이 15명(당연직 3명, 위촉직 12명)이며, 남성 11명, 여성 4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이에 따라 산지관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3명을 제외하면 특정 성별 위원이 7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는 것이 적정함.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산지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3명이 남성일 경우 위촉직 위원은 남성 8

명, 여성 4명이 되어 특정 성별 위원이 7명을 초과하므로 성별균형이 맞지 않음. 따라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성별균형이 맞도록 조정을 권고함

- 사전검토 내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지관리위원회는 2022년 1회 개최되어, 산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련된 사항인 ‘토석채취허가 타당성’을 심의하였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위원회의 기능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 현황

연도별	2020	2021	2022
개최건수	-	-	1

11. 자문기관

(1) 위원회 설치 근거

○ 「세종특별자치시 수도사업 운영 조례」

<p>「세종특별자치시 수도사업 운영 조례」</p> <p>제21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u>자문기관</u>을 둘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자문기관의 기능은 <u>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u></p>

- 「세종특별자치시 수도사업 운영 조례」 제21조에 따라 수도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해 자문기관을 둘 수 있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자문기관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2) 위원회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시의 기본적인 정책 및 대규모 사업에 대한 자문과 법령 등에서 정한 자문기관의 심의·의결·조정 등(이하 “결정”이라고 한다.) 기능의 대행이 필요한 사

안에 대하여 의견 결정을 자문하기 위해 시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함

- 「세종특별자치시 수도사업 운영 조례」 제21조에서 수도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해 자문기관을 둘 수 있고, 그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문기관의 설치 및 기능 수행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최근(2020년~2022년) 3년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수도사업 운영에 대한 안건으로 회의가 개최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후에도 회의를 개최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규정에 대한 실효성이 낮으므로 조문의 삭제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 있음

12.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1) 위원회 설치 근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시·도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도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7. 4. 18., 2019. 12. 10., 2020. 6. 9.>

1.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

1의2. 시·도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및 변경

3. 시·군·구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시·도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시·도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시·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시·도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시·도의 3급 이상 공무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⑥ 시·도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시·도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시·도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시·군·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군·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군·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7. 4. 18., 2020. 6. 9.>

1.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2.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3의2.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시·군·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12. 10.>

1. 해당 시·군·구의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의 읍장·면장·동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⑥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시·군·구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시·군·구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설치 및 구성)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3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동장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전문개정, 2019. 11. 15.]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제30조의 위임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 실시계획, 사업지구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2) 위원회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 본 조례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은 공무원, 변호사,

교수, 연구원 등 지적재조사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적절하게 구성됨. 또한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남성 4명, 여성 4명으로 구성되어 위원의 성별 구성도 적절하여 지적재조사에 있어 형평성과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됨

- 사전검토 내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위원회는 매년 2회씩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음. 다만, 2020~2022년까지는 서면 심의로 진행하여 별도의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으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적절하게 운영되었다고 판단됨

※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 현황(만약 다른 위원회가 대행하고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 운영실적)

연도별	2020	2021	2022
개최건수	2회	2회	2회

13. 학교독서교육위원회

(1) 위원회 설치 근거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도서관 및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도서관 및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조례」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독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학교 독서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
3. 독서 자료 확보방안
4. 교육공동체의 참여방안
5. 그 밖에 독서교육에 관한 주요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에 따른 학교도서관 운영위원회

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③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도서관 및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조례」 제4조는 독서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독서교육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독서교육 관련 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본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 독서교육 계획의 수립,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 등 본 조례 제4조제1항의 심의사항을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위원회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에 따라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학교에 ‘학교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는 바,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불필요한 운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과 같이 ‘학교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학교독서교육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14. 세종특별자치시 학습부진 학생지원협의회

(1) 위원회 설치 근거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학습부진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학습부진 학생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의 지원계획
2. 학습부진 학생 교육지원 관련 주요시책 시행 및 평가, 개선 방안

3. 그 밖에 학습부진 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② 협의회의 기능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과정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 제8조는 학습부진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학습부진 학생지원협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학습부진 학생 지원 관련 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본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학교 독서교육 계획의 수립,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 등 본 조례 제8조제1항의 심의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과정위원회 규칙」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위원회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과정위원회 규칙」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와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과정위원회’를 두고 있는 바,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불필요한 운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과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 학습부진 학생지원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1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위원회

(1) 위원회 설치 근거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위원회의 임무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과정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 실태 조사
3.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 정책 개선
4.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 여건 조성
5. 그 밖에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제6조는 어린이 놀 권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어린이 놀 권리 지원계획 수립, 놀이활동 활성화 등 본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과정위원회 규칙」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위원회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 매년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실시하고 있으나, ① 실제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위원회”의 심의 여부와 상관없이 놀 권리 보장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고 ② 이미 놀 권리 보장을 전제로 각 교육과정을 마련·운영함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교육과정위원회와 구별하여 두는 실익이 없으며 ③ 위원들 조차 놀 권리 보장 지원계획 등에 대한 심의과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실정임
- 위원회 운영 비효율성, 기능 중복·운영 부실 위원회의 통폐합 추세 등 현실을 반영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삭제 권고함

1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위원회

(1) 위원회 설치 근거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지정·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혁신학교의 지정 및 취소
2. 혁신학교의 운영 및 평가
3. 혁신학교의 예산·행정 등의 지원
4. 종합계획의 수립
5. 그 밖에 혁신학교 운영·지원과 관련된 사항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는 혁신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위원회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 혁신학교위원회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 비율이 60%를 넘지 않게 구성하고 있으며, 당연직 위원 외에 교원 및 혁신학교 관련 전문가 등을 70% 이상으로 구성하고 있어 위원회 구성은 적정함
- 집행부 입법평가 기초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위원회는 매년 2회씩 개최함에 따라 혁신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 현황(만약 다른 위원회가 대행하고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 운영실적)

연도별	2020	2021	2022
개최건수	2	2	2

- 반면, 당연직 위원은 공무원위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그 위원의 소속기관, 직위 등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해당 위원은 자신이 속한 행정기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조례 제 7조제2항과 같이 특정 부서의 직책명을 규정함에 따라 조직 개편시 매년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면이 발생한다는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규정에 대해 개정 권고함

1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학차량 지원 위원회

(1) 위원회 설치 근거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학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학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학차량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학차량 지원 대상 학교 선정
2. 통학차량 지원 기간
3. 그 밖에 통학차량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학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는 통학차량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기간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학차량 지원 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위원회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 통학차량 지원 위원회 구성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고 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해관계자가 심의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집행부 입법평가 기초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위원회는 2021년 2회 개최된 것으로 확인되며, 학생배치 및 학생 임시수용 등에 따른 학생들의 통학편의와 통학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의 신설에 따라 통학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확대하여 이 조례의 개편 또는 폐지·제정을 진행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개선이 필요함

※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 현황(만약 다른 위원회가 대행하고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 운영실적)

연도별	2020	2021	2022
개최건수	0	2	0

1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설공사부실공사방지위원회

(1) 위원회 설치 근거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p>「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p> <p>제9조(건설공사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설공사부실공사방지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실공사 여부 2. 부실벌점 3. 그 밖에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p>
--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건설공사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
 3. 건설공사 업무 담당자 등 교육청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제9조는 부실공사, 부실별점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설공사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위원회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 건설부실공사방지위원회 구성시 위원의 성별 균형을 고려하고 있으며, 당연직 위원 1명 외에 건설공사 관련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구성함
- 집행부 입법평가 기초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위원회는 2020년 2회 개최된 것으로 확인되며,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통해 학교 및 체육관 신·증축 등 각종 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공사를 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 현황(만약 다른 위원회가 대행하고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 운영실적)

연도별	2020	2021	2022
개최건수	2	-	-

Ⅱ.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법평가 대상 조례 134건 중 18개 조례에서 다음 표와 같이 관련 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음

연번	위원회명	규정	대행
1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4조	
2	통일교육 활성화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제5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3	지방세심의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시세 기본 조례」 제7조	
4	사회보장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5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미술작품심의위원회
6	부모학습협의회	「세종특별자치시부모학습 지원 조례」 제8조	평생교육협의회
7	운영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8	도시재생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9	지식재산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제13조	과학기술진흥위원회
10	산지관리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3조	
11	자문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수도사업 운영 조례」 제21조	시정조정위원회
12	지적재조사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13	학교독서교육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도서관 및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조례」 제4조	
14	학습부진 학생지원협의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 제8조	교육과정 위원회
15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제6조	교육과정 위원회
16	혁신학교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17	통학차량 지원 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학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18	건설공사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제9조	

- 통일교육 활성화위원회,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부모학습협의회, 지식재산위원회, 자문기관 (「세종특별자치시수도사업 운영 조례」), 학습부진 학생지원협의회 및 어린이 놀 권리 보장위원회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해당 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여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가 난립하지 않도록 함
- 다만, 「세종특별자치시부모학습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부모학습협의회와 「세종특별자치시수도사업 운영 조례」 제21조에 따른 자문기관은 조례 제정 이후 위원회 및 자문회의 개최실적이 없어 해당 위원회의 존치여부 검토 필요
- 또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위원회는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육과정위원회와 그 기능이 중복되며 위원들 조차 놀 권리 보장 지원계획 등에 대한 심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실정이므로 해당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심의에 관한 규정 삭제 필요
- 현행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입법평가 심사 기준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의 전

문성'및 '위원회 구성에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지표 추가 검토 필요

제 4 장 입법평가 제도 개선방안

I. 타지방자치단체 입법평가 규정 및 세부 심사기준

1. 타지방자치단체 입법평가 세부심사 기준표 제정 여부

-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교육청 등 62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서 “조례 입법평가 조례” 또는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등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순번	법령명	평가기준	세부심사 기준표
1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4조(평가시기 및 기준) ① 입법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5.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시행규칙 [별표]
2	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5조(입법평가의 기준) ①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1. 입법근거 및 법적합성 2. 입법내용의 유효성 및 효율성 3. 입법내용의 공평성 4. 주민의견 수용성 5. 지원·위탁의 적정성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의 입법평가 분석 지표에 따른다.	[별표]
3	광주광역시 광산 구 조례 사후 입	제5조(평가 기준 및 시기) ① 사후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없음

	법평가 조례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비용과 편익 예측등의 적정성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4.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 5.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 6.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7.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8.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각종 의무·책무의 이행 여부 ② 사후 입법평가는 2년마다 구청장이 실시한다.	
4	광주광역시 남구 조례 사후 입법 평가 조례	제5조(평가기준 및 시기) ① 사후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3.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 5.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사후 입법평가는 3년마다 구청장이 실시한다.	없음
5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사후입법평 가 조례	제5조(평가 기준 및 시기) ① 사후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비용과 편익 예측 등의 적정성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4.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 5.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 6.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7.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② 사후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한다.	시행규칙 [별지]
6	광주광역시 북구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	제5조(평가 시기 및 기준)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비용과 편익 예측 등의 적정성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4.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 5.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 6. 인권, 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없음

		7.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8.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7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사후입법평가 조례	제5조(평가시기 및 기준) ① 사후 입법평가는 2년 마다 실시한다. ② 사후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및 실효성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3.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적합성 5. 조례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없음
8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5조(평가 기준 및 시기) ① 사후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비용과 편익 예측 등의 적정성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4.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 5.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적합성 6.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7.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② 사후 입법평가는 2년마다 실시한다.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 식]
9	당진시의회 입법 영향평가 조례	제4조(입법영향평가의 방법) 입법영향평가는 별표1의 서식에 따라 시행한다.	별표
10	대구광역시 달서 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6조(평가시기 등) ① 입법평가는 4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적합성 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없음
11	대구광역시 달성 군 조례 입법평가	제6조(평가시기 등) ① 입법평가는 4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없음

	가 조례	1. 입법목적의 실현성 2. 조례에서 정한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 여부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적합성 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12	대구광역시 수성 구 조례 사후 입 법평가 조례	제5조(평가 기준 및 시기) ① 사후 입법평가는 아래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공익의 효율성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4.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 5.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적합성 6.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7.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② 사후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한다.	별지 제2호서 식
13	대전광역시 교육 청 교육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제6조(평가기준) 총괄부서의 장은 교육자치법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입법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교육자치법규 존속에 관한 사항 2. 입법목적 실현 가능성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4. 교육자치법규 집행에 관한 사항 5. 상위법령 및 다른 교육자치법규와의 체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입법목적에 부합한 입법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	별도로 규정
14	대전광역시 대덕 구 조례 입법평 가 조례	제6조(평가시기 등)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을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없음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6조(평가시기 등)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없음
16	대전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4조(평가시기 및 기준) 입법평가는 3년 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위원회·협의회 등 자문기구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없음
17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6조(평가시기 등)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별도로 규정
18	부산광역시 교육청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6조(평가 시기 및 기준)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없음

		5. 위원회·협의회 등 자문기관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19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6조(평가시기 등)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목적의 실현성 2. 조례에서 정한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 여부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여부)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적합성 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시행규칙 별지
20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6조(평가시기 및 기준)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2. 입법의 실효성 및 공평성 3. 입법의 주민 수용성 4. 입법 내용의 적정성 및 현실 부합성 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6. 그 밖에 평가대상 조례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없음
2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6조(평가시기 및 기준) ① 입법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2. 입법의 실효성 및 공평성 3. 입법의 주민 수용성 4. 입법 내용의 적정성 및 현실 부합성 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없음
22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입법평가	제6조(평가시기 등)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없음

	조례	1. 입법목적의 실현성 2. 조례에서 정한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 여부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적합성 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23	부산광역시 사상 구 조례 입법평 가 조례	제6조(평가시기 등)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목적의 실현성 2. 조례에서 정한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 여부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적합성 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없음
24	부산광역시 사하 구 조례 입법평 가 조례	제9조(평가시기 및 기준)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2. 입법의 실효성 및 공정성 3.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현실 부합성 4.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5.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없음
25	부산광역시 서구 조례에 대한 입 법평가 조례	제8조(평가기준) ① 입법평가는 제4조의 추진계획에 따라서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및 실효성 여부 2.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내용의 반영 여부 5. 대상 조례와 관련한 각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없음

		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26	부산광역시 연제 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	제9조(평가시기 및 기준)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2. 입법의 실효성 및 공정성 3. 입법의 주민 수용성 4. 입법 내용의 적정성 및 현실 부합성 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27	부산광역시 영도 구 조례 입법평 가 조례	제6조(평가기준) ① 입법평가는 제4조의 추진계획에 따라 실 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및 실효성 여부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내용의 반영 등 법적 적합성 여부 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 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없음
28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6조(평가시기 등)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별도로 규정
29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에 대한 입	제8조(평가시기 및 기준)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별표

	법평가 조례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2. 입법의 실효성 및 공정성 3. 입법의 주민 수용성 4. 입법 내용의 적정성 및 현실 부합성 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	제12조(평가기준 및 시기) ① 입법평가는 제4조의 추진계획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2. 입법의 실효성 및 공정성 3. 입법의 주민 수용성 4. 입법 내용의 적정성 및 현실 부합성 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31	부여군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5조(평가시기 및 기준) ① 사후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한다. ② 사후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별지
32	부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	제9조(평가시기 및 기준)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2. 입법의 실효성 및 공정성 3. 입법의 주민 수용성 4. 입법 내용의 적정성 및 현실 부합성 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33	사천시 조례 사 후 입법평가 조 례	제4조(입법평가 기준 및 시기) ①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 5.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6. 위원회 등 자문기관 구성 및 운영 실태 7. 그 밖에 조례 규정의 실행에 관한 사항 ②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입법평가 분석지표는 의장이 정한다. ③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한다.	없음
34	서울특별시 강서 구 조례 입법평 가 조례	제5조(입법평가 기준 및 시기) ① 입법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 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2. 조례 내용의 적정성·공평성, 주민 수용성 3. 상위법령의 변동 사항 반영 여부 4.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5. 그 밖에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의 입법평가 기준 표에 따른다.	별표
35	서울특별시 동작 구의회 입법영향 평가 조례	제4조(입법영향평가 기준) ① 입법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적합성·실효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4.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5.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 1의 입법영향평 가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별표
36	서울특별시 양천 구 조례 입법평 가 조례	제4조(입법평가의 기준) ① 입법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적합성·실효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별표

		4. 상위법령 위반 및 다른 조례와의 충돌 여부 5.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및 집행 여부 6.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7.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의 입법영향평가 기준에 따른다.	
3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4조(평가시기 및 기준) ① 입법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4.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5.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의 입법평가 심사 기준에 따른다.	별표
38	수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6조(입법평가 기준)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와 별표의 입법평가 심사기준표를 그 평가기준으로 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2.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3. 상위법령 위반 및 다른 조례와의 충돌 여부 4.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5. 위원회 등 자문기구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이행 여부 ② 입법평가 심사기준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별표
39	순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	제6조(입법평가 시기 및 기준)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에서 규정된 의무 사항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없음
40	시흥시의회 입법	제4조(입법영향평가 방법 등) ① 입법영향평가는 2년마다 정	별표

	영향평가 조례	<p>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p> <p>② 입법영향평가는 별표의 입법영향평가 기준표에 따른다.</p> <p>③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영향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p>	
41	아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p>제6조(평가시기 등)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p>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없음
42	여수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	<p>제8조(평가기준) ① 입법평가는 제4조의 추진계획에 따라서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및 실효성 여부 2.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내용의 반영 여부 5. 대상 조례와 관련한 각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에 따른 이행 여부 <p>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없음
43	영암군 입법평가 조례	<p>제5조(입법평가 기준 및 시기) ①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3.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 5.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없음

		6. 위원회 등 자문기관 구성 및 운영 실태 7. 그 밖에 조례 규정의 실행에 관한 사항 ②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입법평가 분석지표는 의장이 정한다. ③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한다.	
44	예천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	제8조(평가시기 및 기준)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및 실효성 여부 2.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개정 및 폐지 내용의 반영 여부 5. 대상 조례와 관련한 각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없음
45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6조(입법평가 시기 및 기준)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한다. ②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및 실효성 여부 2.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조례의 시행에 따른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의 반영 여부 등 5. 조례와 관련한 각종 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없음
46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7조(평가시기 및 기준) 입법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별표
47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6조(평가시기 등) ① 입법평가는 4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별도로 규정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48	인천광역시 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	제5조(사후 입법평가 시기 및 기준) ① 사후 입법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3.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적합성 5.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6. 위원회 등 자문기관 구성 및 운영 실태 7. 그 밖에 조례 규정의 실행에 관한 사항 ② 사후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사후 입법평가 분석지표는 교육감이 정한다.	없음
49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5조(평가시기 및 기준)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여부 2. 조례에서 정한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법 평가의 평가시기 및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없음
50	장수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6조(평가시기·기준)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및 실효성 여부 2.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시행규칙 별지

		4. 상위법령 제정·개정사항 반영 등 법적 적합성 여부 5. 상위법령 위반 및 다른 조례와의 충돌 여부 6.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7. 그 밖에 평가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51	장흥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	제8조(평가시기 및 기준)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및 실효성 여부 2.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내용의 반영 여부 5. 평가대상 군 조례와 관련한 각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대상 군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없음
52	전라남도 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5조(사후 입법평가 기준 및 시기) ① 사후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3.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적합성 5.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6. 위원회 등 자문기관 구성 및 운영 실태 7. 그 밖에 조례 규정의 실행에 관한 사항 ② 사후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사후 입법평가 분석지표는 교육감이 정한다. ③ 사후 입법평가는 2년마다 실시한다.	없음
53	전라남도 입법평가 조례	제5조(입법평가 기준 및 시기) ①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3.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적합성 5.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시행규칙 별지

		<p>6. 위원회 등 자문기관 구성 및 운영 실태</p> <p>7. 그 밖에 조례 규정의 실행에 관한 사항</p> <p>②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입법평가 분석지표는 의장이 정한다.</p> <p>③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한다.</p>	
54	전라북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p>제4조(평가기준) ①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p> <p>1.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p> <p>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p> <p>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p> <p>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p> <p>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p> <p>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p> <p>② 제1항에 따른 입법평가의 세부기준은 별표를 따른다.</p>	별표
55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제7조(입법평가 실시) 입법평가는 별표의 입법평가 분석지표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한다.	별표
56	제천시 조례 입 법평가 조례	<p>제6조(평가시기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3년마다 입법평가를 실시한다.</p> <p>1. 입법 목적의 실현성</p> <p>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p> <p>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p> <p>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p> <p>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p> <p>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에 따른 이행 여부</p> <p>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법평가의 평가시기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p>	없음
57	증평군 조례 사 후 입법평가 조 례	<p>제5조(평가기준) 사후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p> <p>1. 입법 목적의 타당성, 실현가능성</p> <p>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수립 여부</p> <p>3.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p> <p>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여부</p> <p>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p> <p>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p>	없음
58	진도군 조례에	제8조(평가시기 및 기준)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없음

	대한 입법평가 조례	<p>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및 실효성 여부 2.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내용의 반영 여부 5. 대상 조례와 관련한 각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59	천안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p>제5조(평가시기 및 기준) ① 사후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한다.</p> <p>② 사후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p>③ 평가시기 및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별도로 규정
60	충청남도 조례사후 입법평가 조례	<p>제4조(평가기준) ①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p>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의 입법평가 기준표에 따른다.</p>	별표
61	파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	<p>제6조(입법평가 기준) ①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와 별표의 입법평가 심사기준표를 그 평가기준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법목적의 실현성 및 입법내용의 실효성·타당성 2. 상위법령의 위반 및 다른 조례와의 충돌 여부 3.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별표

		4. 위원회 등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실태 5. 그 밖에 조례 규정 사항의 이행 여부 ② 시장은 조례의 성격에 따라 입법평가 심사기준표를 제8조에 따른 입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62	해남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6조(평가기준) ① 입법평가는 제4조의 추진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및 실효성 여부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내용의 반영 등 법적 적합성 여부 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없음

- 62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조례 전수조사 결과 30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입법평가 세부 심사기준을 공개(일부 지자체는 세부심사 기준을 가지고 있으나 공개하지 않음)하고 있으며, 대부분 지자체의 세부 심사기준은 세종시와 크게 다르지 않음
- 또한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대부분은 실제로 입법평가를 실시한 적이 없거나 계획이 없어 세부적인 심사기준이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2. 부산광역시 입법평가 세부심사 기준

- 부산시의 입법평가표는 타지자체에 비해 세부항목을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입법평가 기본자료 및 입법평가표 포함를 주관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 예시 또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 세종시에서 자체 인력을 통한 입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부산시와 같은 입법평가 기본자료 및 입법평가표 작성 예시가 도움이 될 수 있음

○ 부산광역시 입법평가 기본자료 및 입법평가표는 다음과 같음

[붙임 3]	서식 및 글자 규격 임의변경 금지	※ 작성 예시(파란색 부분)
※ 「관리번호」란은 법제업무 부서에서 기재		
※ 관리번호	입법평가 기본자료(실·과 작성용)	
조례명	「부산광역시 ○○○ 지원에 관한 조례」	
관계법령	「○○○법」, 「○○○조례」 ※ 관련 법, 시행령, 조례명 등을 기재	
평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그 취지와 입법 목적대로 시행되고 있음 ○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제△조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므로 차후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대상자 ◇◇◇에 대해서 법과 조례에 따른 중복 지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중복적인 지원을 피할 필요가 있음 ○ ◇◇◇ 시행계획 수립후 공모에 의해 수상후보자를 추천 접수하고 공모된 자료에 대해 심사위원회를 분과위별 각 7명(5개 분과) 총 35명을 구성하여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하고 있어 개별 규정간에 모순되지 않음 ○ 이 조례와 「○○○조례」는 ◇◇◇을 지원하려는 유사동일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있으므로 정책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 통합이 필요함 ○ 조례에서 규정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 등은 누락되어 있어 다음 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할 예정 ○ 제△조 관련 예산을 2017년 ○○개 기관에게 ○○백만원 지원, 2018년 ○○개 기관에게 ○○백만원 지원하여 적정하게 편성 집행되고 있음 ○ 소득과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 금액을 차등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그 지원 기준이 객관적이고 형평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됨 ○ 위원회는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30명(당연직 10, 위촉직 20)으로 구성(임기 2년, 1회 연임)되어 있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구성되어 있음(여성4, 남성5) ○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운영중에 있으므로 양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위원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제△조의 규정은 「○○○조례」 또는 기 추진 중인 업무와 중복되는 면이 있으므로 상위법 「○○○법」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함 	
첨부자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법평가표 2. 해당 조례 및 관계법령 3. 각종 증빙자료(예산 편성·집행내역, 기본계획 등 계획서, 위원회 구성· 	

<p style="color: red;">운영 현황 등)</p> <p style="color: red;">4. 그 밖에 입법평가에 필요한 자료</p>				
작성자	부서명 / 팀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행정)
	○○과/△△팀	행정○급	○○○	0000

입법평가표(실·과 작성용)

☐ 조례명 :

(※조례별 개별 작성)

구분	세부항목	평가척도	현실태 및 문제점 (관련조항 표시)	검토의견
조례의 적법성	■ 조례의 각 조항에서 관련 법령 조항이 정확하게 인용되어 있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해당없음	· 제12조제6호 및 제17조의 법령 인용 조항 불일치	· 제12조제6호 및 제17조 중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인용 조문이 변경되어야 함(「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 사항을 정하는 조례의 조항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규정되었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해당없음	·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제△조의 경우 법률의 위임 없음	·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이 필요함
	■ (1단계)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조례가 법령과 모순되거나 충돌되는 않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해당없음	· 관련 법령 「○○○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조가 법제◇조와 충돌함	· 조례 제△조를 법 제◇조에 맞추어 개정할 필요가 있음
	■ (2단계) 모순·충돌이 있다면 해당 조항이나 조례를 개정하였는가? / 개정예정인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해당없음	· 제△조가 법◇조와 충돌함	· 차후 조례 개정 예정임
조례의 정당성 및 실효성	■ 조례가 다른 조례와 충돌·모순 및 대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는가? 혹은 조례의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추진계획에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추진계획의 수립’과 제8조 ‘○○위원회 구성’의 순서	· 제△조 ‘추진계획의 수립’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혹은 제8조 ‘○○위원회 구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

구분	세부항목	평가척도	현실태 및 문제점 (관련조항 표시)	검토의견
	개별규정 간에 모순되는 점은 없는가?		간에 모순이 발생할 수 있음(제△조)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례 개정 필요
	■ (1단계)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동일한 목적의 제도를 규정하는 법률이 만들어졌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2017.1.11.에 동일한 목적의 제도를 규정하는 「○○○법」이 제정됨	· 법과 조례에 따른 중복적인 지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 (2단계) 그렇다면 해당 법률의 제정으로 인하여 조례가 실효성이 없어졌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해당없음	· 법과 조례에 따른 중복적인 지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제△조)	·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중복적인 지원을 피할 필요가 있음
	■ (1단계) 조례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취지의 조례가 있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이 조례와 유사한 취지의 「○○○조례」가 2017.1.11.에 제정	
	■ (2단계) 그렇다면 통합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해당없음	· 이 조례와 「○○○조례」는 ◇◇◇을 지원하려는 유사·동일한 목적으로 제정	· 양 조례는 유사 목적을 가지고 있어 정책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 통합이 필요함
계획 수립 및 추진 여부	■ 조례에서 규정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해당없음	· 기본계획 : ○○○종합대책 (○○과-○○호, 2018.3.1.) · 시행계획 : ○○○추진계획(○○과-○○호, 2018.4.1.)	·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2016 ~ 2017) 하고 계획 수립함 · 5년 단위 중장기계획은 미수립, 1년 단위 시행계획은 수립함
	■ 조례에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하도록 항목이 계획에 포함되어 수립되었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해당없음	· 조례에서 규정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 등은 누락되어 있음	· ◇◇◇ 등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므로 다음 계획 수립시 반영 예정
	■ 수립된 계획이 실제 추진되고 있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해당없음	·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계획 수립(○○○과-○○호, 2018.9.1.)	· 2018.9.1.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계획을 수립하는 등 조례 규정대로 이행함
예산 편성 및 집행의	■ (1단계)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해당없음	· 2017년 : ◇◇◇에 ○○백만원 편성, △△백만원 집행 (제△조) · 2018년 : ◇◇◇에 ○	※조례와 직접 관련된 예산 총액만 기재

구분	세부항목	평가척도	현실태 및 문제점 (관련조항 표시)	검토의견
적정성	■ (2단계) 그렇다면 예산이 조례에 규정된 특정 사무를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고 그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가?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백만원 편성, △△백만원 집행 · 2017년 : ○○개 기관 ○ ○백만원 지원(제△조제△항) · 2018년 : ○○개 기관 ○ ○백만원 지원(제△조제△항)	· 위원회 수당 편성·집행 적정함(상세내역 별첨) · ○○○보조금 등 편성집행 적정함(상세내역 별첨) · ○○○보조금 등은 편성 대비 집행을 미비함(상세내역 별첨)
	■ (1단계)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인 경우 해당 지원 및 육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는가?	①그렇다 ②그렇지 않다 ③ 해당없음	· ○○○지원 기준 수립(○○○과-○○호, 2017.5.1.)	
	■ (2단계) 그렇다면 해당 기준이 객관적이고 형평에 부합하는가?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 지원 및 육성 기준 명시 · 대상자 ◇◇ : ○○백만원 지원 · 대상자 ◎◎ : ○○백만원 지원	· 소득과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 금액을 차등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그 기준이 객관적이고 형평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됨
	■ 예상하지 못한 집행비용/부작용이 발생한 경우가 있는가?	①그렇다 ②그렇지 않다 ③ 해당없음	· 조례 제정 이후 「○○○법」이 제정(2017.8.)되었고, 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개소함(2018.5.)	·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 위원회가 구성되었는가?	①그렇다 ②그렇지 않다 ③ 해당없음	· 제△조에 따라 2017.3.1. 30명으로 구성	
	■ 위원회의 구성(위원수, 위원의 자격 등)은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졌는가?	①그렇다 ②그렇지 않다 ③ 해당없음	※ 위원회 구성현황 : 별첨 · 구성: 30명(당연직 10, 위촉직 20), 남성 25, 여성 5 · 임기: 2년, 1회 연임가능	· 위원회는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구성되어 있으나,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을 확대하여 한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 구성 이후 실제 위원회가 개	①그렇다 ②그렇지 않다	· 11회 개최(‘17년부터 연 2~3회 개최)	

구분	세부항목	평가척도	현실태 및 문제점 (관련조항 표시)	검토의견
입법목적 실현성 통	최된 바 있는가? (서면 심리 포함)	③ 해당없음		
	■ 위원회 개최 안건 이 위원회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가?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 위원회의 기능에 부합 하는 △△, ◇◇, ○○ 안 건 등을 심의함	· 위원회에 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 안건 등을 심의 사항에 포함시 킬 필요가 있음
	■ 해당 분야에서 위 원회가 반드시 필 요한가? / 통합이 필요한가? / 폐지 가 필요한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 다 ③ 해당없음	·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 고 있는 「○○○조례」 에 따른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음	· 동일·유사 기능을 수행 하는 양 위원회를 통·폐합 하여 위원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조례제정 이전 및 이후를 비교할 수 있는 정책적 통 계가 있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 다 ③ 해당없음	· 조례제정 이전 (2016) 청년창업자수○○명 · 조례제정 이후(2017) : 청년창업자수○○명	
	■ 조례가 시행된 후 지역현안 및 불편 해소에 기여하였 는가?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 조례 제정 전후 통계 자 료에 의거 판단하건대,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으 로 청년창업자 수의 증 가에 다소 기여함	· 청년창업자에 대한 지속 적인 지원으로 청년취업 률을 증가시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임
입법목적 실현성 통	■ 조례가 특정지역 이나 특정계층에 유리하게 작용하 고, 동시에 다른 지역이나 다른 계 층에 불리하게 작 용한 경우가 있는 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 다 ③ 해당없음	· 2017년: ○○개 기관(단 체)○○백만원 지원 · 2018년: ○○개 기관(단 체)○○백만원 지원	· ○○○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약자인 소외계층 에 대한 것으로, 특정계 층에만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음
	■ 조례제정의 취지 와 관련된 민원이 있다면 그 추이 는 조례제정 전후 로 어떻게 변화하 였는가?	① 매우 감소 ② 다소 감소 ③ 변화 없음 (해당없음) ④ 다소 증가 ⑤ 매우 증가	· 조례제정 이전(2016년) : ○○○에 관한 민원 △ △건 · 조례제정 이후(2017년) : ○○○에 관한 민원 △ △건	
	■ 조례가 입법목적 및 제·개정 취 지에 맞게 시행되 고 있는가?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 조례제정 이전(2016년) : ○○○에 관한 통계자 료 · 조례제정 이후(2017년) : ○○○에 관한 통계자 료	· 조례 제·개정 전후 ○ ○○에 관한 통계자료로 판단하건대, 제△조의 규 정은 지역 경제의 발전이 라는 제·개정 취지에 맞 게 시행되고 있음

구분	세부항목	평가척도	현실태 및 문제점 (관련조항 표시)	검토의견
				· 제◇조의 규정은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좀 더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함
기타	■ 그 밖에 조례에서 규정 한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시는 시민이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에 참여하도록 시책을 개발 추진토록 하고 있음(제3조)	· 시는 건기대회 행사, 100원 불씨 콘서트, 나눔장터 운영 등의 시책을 실시한 바 있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장기 등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등록 및 접수창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현재 16개 구·군 보건소에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운영하고 있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시장은 장기 등을 기증한 사람과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현재까지 예우 및 지원 실적 없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시장은 장기 등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9조)	· 현재까지 홍보대사 위촉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임

< 입법평가표 작성 시 유의사항 >

- 가. 해당하는 항목만 상세하게 기술하되, 평가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증빙자료가 방대할 경우 요약자료 첨부)
- 나. ‘그렇다’ 또는 ‘그렇지 않다’ 등 의견 제출 시에는 반드시 ‘현실태 및 문제점’ 및 ‘검토의견’란 기재가 필수적이고, ‘해당없음’인 경우에도 간단한 이유 명시
- 나. (예산 관련) 조례에 지원근거 규정이 있을 경우 예산총액, 집행총액만 기재하면 입법평가가 곤란하므로 분야별(장비구매, 인력양성 등) 세부집행내역 등 평가할 수 있는 상세자료 제출
- 다. (위원회 관련) 회의개최 여부·횟수뿐만 아니라 위원회 구성현황, 위원회 회의자료 및 개최결과보고서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개괄적인 자료 제출

II. (일본) 이타미시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준

- 일본의 경우에도 조례의 평가(재검토)제도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가 많으며, 각 지방자치단체 각각의 평가기준에 따라 조례 평가를 시행하고 있음
- 일본의 조례 평가(재검토) 사례를 살펴보면 효고현의 이타미시는 조례의 정책으로서의 최적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5년마다 조례의 효과 및 타당성을 분석하고 평가함.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p>「이타미시조례 등의 제정 및 재검토에 관한 지침(伊丹市条例等の制定及び見直しに関する指針)」</p> <p>6. 조례의 정기적인 평가</p> <p>(1) 조례는 정책으로서의 최적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5년마다 그 효과 및 타당성 등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p> <p>(2) 평가의 시점은 다음과 같다.</p> <p>(필요성과 타당성)입법사실이나 과제에 변화가 없는가? 현재도 조례가 필요할까?</p> <p>(유효성)규정내용은 목적의 실현에 효과를 주고 있는가?</p> <p>(효율성)규정내용은 비용효과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수법인가?</p> <p>(적법성)법령이나 판례와의 관계성에 변화는 없는가? 현재도 적법한 내용인가?</p> <p>(공평성)규정내용에 의한 효과·부담은 공평성이유지되고 있는가?</p> <p>(적정성)집행·운용은 적정하게 되어 있는가? 불합리한 절차 등은 없는가?</p> <p>(정책 방침과의 무결성)정책의 기본 방침과 일치하는가? 괴리가 생기지 않았습니까?</p>

- 「이타미시조례 등의 제정 및 재검토에 관한 지침」에서 조례는 정책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제정 후 적절하게 집행·운용하며,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검토를 수행하고 조례가 항상 유효하고 합리적이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평가시 필요성과 타당성, 유효성, 효율성, 적법성, 공평성, 적정성, 정책 방침과의 무결성을 평가기준으로 함
- 이타미시와 같이 일본에서 조례 입법평가는 대체로 ① 필요성, ② 유효성, ③ 효율성, ④ 적법성, ⑤ 공평성, ⑥ 적정성을 평가의 기준으로 함

- 이 중에서 필요성과 적법성은 조례가 성립하기 위한 불가결의 조건이며, 그 외의 항목은 보다 좋은 조례가 되기 위한 조건이라 할 수 있음
- 일본의 평가지표가 우리나라의 평가지표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평가지표가 더 세분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우리나라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대상으로 주로 입법평가가 이루어지는 데 반해 일본은 지침에서 조례 제정의 기본 방침 또한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제정 단계에서도 이러한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Ⅲ. 입법평가 규정 및 운영방식 개선방안

- 세종시의 경우 연구용역을 통하여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부산시의 경우 입법평가 기본자료(입법평가표 포함)를 주관부서(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작성하는 등 자체 인력을 통한 입법평가를 수행하고 있음
- 향후 세종시에서 자체 인력을 통한 입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부산시와 같은 입법평가 기본자료 작성 예시가 도움이 될 수 있음
- 자체 입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현재의 인력으로는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인력의 확충 및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함
- 입법평가가 계속되고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세종시에 적합한 입법평가 규정 및 세부 심사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 및 수정이 필요함
- 입법평가 기초자료의 수시 업데이트를 통하여 자체평가 제도의 안착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